



방콕의 5월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15일(현지시간) 정부군의 총에 맞은 시민을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시위대는 지난 13일부터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하며 '라차프리송' 지역을 점거하고 있으며, 단전·단수·대중교통 두절 등의 봉쇄 작전 외중에 시민 30여명이 죽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李大통령 올해도 불참

내일 5·18 항쟁 30주 기념식 총리·여야대표 등 대거 참석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여야 대표 등 정치인 등이 대거 5·18 민주 묘지를 찾아 5월 영령의 뜻을 기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는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및 5·18 관련 단체 회원,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주요인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각 정당대표 및 지역국회의원 등 정계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방글라데시 총리와외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

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07년 5·18 항쟁 28주년 기념식에는 참석했으며, 지난해 29주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별도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숨은 10%'가 격전지 10곳 승패 가른다

지방선거 D-16

6·2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광주·전남지역 격전지에서는 '숨은 표'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 답변하지 않은 30% 내외의 부동층을 '숨은 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 선거에 반영되는 수치를 10% 내외로 보고 있다. 이는 10% 내외의 지지율 격차가 있더라도 숨은 표로 인해 당락이 바뀔 수 있으며 10여 곳에 이르는 광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격전지 선거 결과도 숨은 표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심판론'과 '그레도 민주당'이라는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며 숨은 표의 향배는 오리무중이다. '민주당 심판론'은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무능과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되는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기류다. '그레도 민주당'은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에서라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서구, 남구 등 민주당과 무소

속 후보들이 10% 안팎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일수록 숨은 10%를 차지하려는 열기는 뜨겁다. 이들을 확실한 지지층으로 돌려보야 안심할 수 있어서다. 전망도 제 각각이다.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무소속 현직 단체장들은 '민심을 거스른' 공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져 현재의 판세를 균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보여준 정치적 무기력과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무능과 오만이 이미 도를 지나친데다 지방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는 점에 숨은 표의 상당 부분은 능력이 검증된 무소속 후보에게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후보 확정 이후 인지도가 크게 올라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자가 늘어 막판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취약지역에 당의 간판급 정치인들을 대거 투입해 표를 이를 한다는 전략이다. 변수는 천안함 사건 결과 발표에 따른 '북풍'의 세기, 노무현 대통령 1주기를 맞은 추모 열기다. 수도권에 북풍이 거세게 불 경우엔 지역 유권자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노풍'이 만만치 않게 불게 되면 '민주당 심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87명 분석해보니

폭력·도박 등 전과자 수두룩 광주 38% 전남 14% 軍미필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로 등록된 87명을 분석한 결과, 광주 구청장 후보보다는 전남 시장·군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재력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10억원 이상을 신고한 광주 구청장 후보는 3명에 불과한 반면, 전남 시장·군수 후보는 15명에 달했다.

광주지역 단체장 후보 18명 가운데 무소속 전주연 서구청장 후보가 16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민주당 송광운(12억6400만원) 북구청장 후보, 국민참여당 송병태(10억9000만원) 광산구청장 후보가 10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한나라당 하방수 서구청장 후보와 민주당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는 각각 3380만원, 3500만원을 신고해 구청장 후보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69명 중에서는 위백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인 민주당 임성훈 나주시장 후보가 95억2500만원을 신고해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중 가장 거부가 밝혀졌다.

이어 목포미래병원 이사장인 무소속 양승일 무안군수 후보가 56억9000만원을 신고했고, ▲무소속 김중석 여수시장 후보 26억9000만원 ▲민주당 김중식 완도군수 후보 23억6500만원 ▲민주당 정종득 목포시장 후보 21억9600만원 ▲무소속 김경부 진도군수 후보 21억

3000만원 등 6명이 20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또한, 민주당 오현섭(19억7000만원) 여수시장 후보, 무소속 황주홍(19억4000만원) 강진군수 후보, 무소속 박우량(19억6000만원) 신안군수 후보, 민주당 김일태(14억8500만원) 영암군수 후보, 무소속 노관규(17억7000만원) 순천시장 후보, 무소속 이 청(16억5000만원) 장성군수 후보, 민주당 조보훈(16억4000만원) 순천시장 후보 등 9명은 10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반면 무소속 이석재 해남군수 후보는 마이너스 3억7000만원을, 무소속 이인호 목포시장 후보는 마이너스 1억5000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전과=이석재 해남군수 후보는 폭력전과 4건에 공무집행방해 1건 등 전과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소속 김병동 진도군수 후보는 변호사법, 선거법 위반 및 무고 등 전과가 3건에 달했다. 무소속 전경태 구례군수 후보는 폭력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전과 2건을 기록했다.

민주당 안병호 함평군수 후보는 도박, 민주노동당 박형기 장흥군수 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민주노동당 박기철 목포시장 후보와 민주노동당 박형매 광양시장 후보는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무소속 이탁우 보성군수 후보는 공무집행 방해, 무소속 임호정 화순군수 후

보는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 정형택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선거법과 집시법 위반 등 2건의 전과가 있고, 민주당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와 무소속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 민주노동당 신중철 광산구청장 후보는 집시법 위반 전과가 있다.

◇병역=광주는 병역의무 대상 후보 17명 가운데 국보무를 하지 않은 미필자는 7명으로 무려 38.8%에 달했다.

민주당 유태명 동구청장·최영호 남구청장 후보, 민주당 신중철 광산구청장 후보·강기수 서구청장 후보, 무소속 황일봉 남구청장·하승만 동구청장 후보, 국민참여당 서대석 서구청장 후보가 국보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영호·서대석 후보 등은 집시법 위반 등 수형으로 인해 국보무가 면제됐으며, 강기수·황일봉·신중철 후보 등은 질병으로 인해 제2국민역으로 분류됐다.

전남은 기초단체장 후보 69명 가운데 10명(14%)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성훈·김대동 나주시장 후보, 박형태 광양시장 후보, 신금식 고흥군수 후보, 이명환 장흥군수 후보, 이석재 해남군수 후보, 강성중, 박세준 신안군수 후보, 안병호 함평군수 후보가 국보무를 안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 18곳

단체장 영암 1명, 광역·기초의원 17명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되는 행운을 안은 후보가 전남에서만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단독출마 등으로 인해 투표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후보가 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1명을 비롯, 광역의회 의원 14명, 기초의회 의원 2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1명 등 모두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자는

115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후보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명이더라도 투표를 실시, 투표자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이 결정됐으나 이번 선거부터 '단체장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됐다. 지방의원은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게 된 때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다음은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 ◇전남기초단체장 ▲영암군수 김일태 ◇전남도의원 ▲목포시 1선거구(강성희) ▲목포시 2 (권옥) ▲순천시 2 (박동수) ▲담양군 1 (박철홍) ▲담양군 2 (김동주) ▲곡성군 (정환태) ▲보성군 2 (임명규) ▲화순군 2 (홍익식) ▲강진군 2 (윤도현) ▲완도군 1 (서정창) ▲영암군 1 (손태열) ▲영암군 2 (강우석) ▲무안군 2 (정영덕) ▲신안군 1 (임흥빈) ◇기초의원 ▲담양군 라 선거구(김기성·조흥전) ▲담양군 비례(변정숙) /김지 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EO 명품 아카데미' (CEO Premium Academy) featuring a building image and text about a 2nd round of CEO training.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cademy and a table of course details.